

광주·전남 행정통합 본궤도... '실무준비단' 가동

특별법 통과 앞두고 조직 개편 속도... 7월 통합특별시 출범 '카운트다운' 공동 컨트롤타워 신설 추진... 시스템 통합·산하기관 정비 등 난제 산적

광주시와 전남도가 통합을 위한 첫 단추인 특별법 제정이 가시화되자 실무 작업을 도맡아 추진할 기구 출범을 서두르고 있다.

통합 청사진을 그렸던 기존의 추진단 체제를 허물고, 방대한 행정 시스템과 조직을 하나로 묶어 낼 '실무준비단'을 각각 꾸려 오는 7월 통합특별시 출범을 향한 카운트다운에 들어간다.

19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행정통합을 위한 후속 조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3월 초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7월 1일 공식 출범까지 불과 4개월 남짓한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양 사·도의 행정 체계를 융합할 실무 전담 조직의 구성이다. 그동안 법안 마련과 대시민 홍보에 주력해 온 '행정통합추진단'은 실제적인 통합 업무를 수행할 '실무준비단'으로 전면 개편된다.

광주시는 이를 위해 조직 개편안을 확정하고 시행을 앞두고 있다.

관련 조례가 20일자로 공포되면 시는 다음 주

중 3급 단장을 중심으로 2개과, 14명 규모의 실무준비단을 공식 출범시킬 예정이다.

이들은 시청 내 12층 등에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하고 통합 로드맵 작성에 착수한다.

전남도도 시와 보조를 맞춰 실무준비단 구성을 서두르고 있지만 공식 출범은 3월 초로 잡고 있다.

다만, 도의 경우 아직 정식 조직화 논의 중이며 당분간 기존 추진단 형태를 유지하면서 정식 직제 개편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실무준비단이 출범하면 이들은 마산·창원·진해(마창진) 통합이나 광주·청원 통합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광주와 전남은 광역지자체 간의 결합인 만큼, 기초지자체 통합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하고 복잡한 시스템 통합 과제를 거쳐야 한다.

수백 개에 달하는 각종 행정·전산 시스템을 일원화하고, 양 사·도 산하 기관들의 유사·중복 기능을 통합하는 작업은 통합의 가장 큰 난제로 꼽힌다.

당장 7월 1일 통합특별시 간판을 달고 정상적인 행정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기본적인 매뉴얼과 시스템 가이드라인 마련이 발등의 불이다.

광주시 자치행정국은 이미 각 실무 부서에 통합에 필요한 준비 작업과 조정 대상 등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시는 업무와 조직 가운데 무엇을 먼저 합치고 조정할지 우선순위를 정해 7월까지 단기 로드맵을 확정할 계획이다.

양 사·도의 개별적인 준비와 더불어, 이견을 조율하고 통합 작업을 총괄 지휘할 '컨트롤타워'를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광주시는 사·도 실무준비단의 상급기구로 양측을 아우르는 '공동 통합출범준비단'을 신설하는 구상을 마련, 전남도에 의향을 타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부처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채널도 가동된다.

현재 행정안전부에는 광주·전남에서 파견된 국장급 인사와 9명의 직원이 배치돼, 중앙정부 차원의 법적·제도적 지원을 이끌어내고 지방의 의견을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완성된 단계는 아니지만, 조직 개편이 마무리되는 대로 양 사·도가 긴밀히 협력해 산적한 과제를 풀어나갈 것"이라며 "통합특별시 출범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치밀하고 꼼꼼하게 실무를 행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명절 끝 선별장은 '쓰레기 전쟁' 19일 광주시 북구 월출동 재활용 선별장에 명절 기간 사용했던 스티로폼 용기가 수북이 쌓여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민주, 2월 임시국회 행정통합법 최우선 처리

6·3 지방선거 전 매듭 방침...국힘 반대 시 필리버스터도 불사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6·3 지방선거에서 적용될 행정통합법을 최우선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어 다음 달 초까지 이어질 임시국회 회기 중 이른바 3대 사법개혁법(대법관증원·재판소안·법외국직)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국민투표법, 3차 상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등을 순차적으로 처리키로 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19일 국회에서 정책조정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오는 24일 개최될 본회의와 관련, 우리가 처리할 법안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행정통합특별법의 경우 전남·광주, 대구·경북, 충남·대전 통합법이 함께 묶여 있다. 국민의힘은 이 가운데 충남·대전 행정통합에 대해 "지방분권에 대한 철학과 의지가 결여된 국회의 졸속 심사"라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여야간(특별법 처리의) 합의가 된다면 민주당은 처리할 것이다. 만약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행정통합법을 처리한 뒤 3대 사법개혁법과 검찰개혁법안인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등도 순차적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시, 각화도매시장 이전 부지 '투기 차단막' 쳤다

북구 효령·용전동 일원 규제 묶어

광주시가 각화도 농산물도매시장 이전 예정지 일대의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을 막기 위해 '규제 빗장'을 걸어 잠갔다.

후보지로 낙점된 북구 효령·용전·용강동 일원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건축물 신축 등 각종 개발 행위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북구 각화도매시장 이전 건립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북구 효령동, 용전동, 용강동 일원 32만4972㎡(약 9만8304평)를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행정 절차에 착수했다.

이달 중으로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 중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최종 공고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보상금을 노린 투기 세력의 유입이나 이른바 '알박기' 식의 무분별한 건축 행위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겼다.

해당 지역은 도매시장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면서 지가 상승 기대감이 높아져 투기적 거래가 성행할 우려가 제기돼 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향후 5년간(2026년 3월~2031년 3월)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때 반드시 광주시장(또는 위임받은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확한 방

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묶이게 되면 향후 3년간(2026년 4월~2029년 4월)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 개축은 물론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 채취 등 일체의 개발 행위가 금지된다. 이는 보상을 염두에 두고 비합리투자를 설치하거나 묘목을 심는 등 사업비를 증가시키고 사업 추진을 지연시키는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광주시는 1991년 개장한 각화도매시장의 현대화가 시급한 과제라고 판단, 이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오는 2036년까지 총사업비를 투입해 부지 21만㎡, 건축 연면적 8만㎡ 규모의 최첨단 도매시장을 건립할 계획이다.

/정병호 기자 jusbh@

AI 재확산에 ASF까지...전남 축산농가 비상

구례 육용오리 농장서 항원 검출

전남에서 또다시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확인됐다.

올 겨울에만 벌써 9번째로, 지난 동절기 발생경수(5건)에 2배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출하와 도축이 금지된 전남 축산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구례군 용방면의 한 육용오리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됐다. 육용오리 3만여 마리를 사육 중인 이 농장은 사육 중인 개체들에서 별다른 이상징후는 없었으나, 출하 전 검사를 통해 AI 항원이 확인됐다. 고병원성 여부는 확인 중이다.

방역당국은 즉각 해당 농장의 출입을 차단하고 방역을 실시하는 등 조종 조치에 나섰다. 전남도는 AI 확산 방지를 위해 이 농장 주변 10km를 방역대로 설정, 하천과 저수지, 도로 등을 대상으로 소

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남도와 전북 남원, 경남 하동 등지에 오는 20일 정오까지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19일 기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전국적으로는 44건으로 전남에서는 8건이 발생했다.

ASF도 돼지 사육 농가의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전남에서는 이날까지 영광과 나주 등지에서 총 2건의 ASF가 확인됐다. 전국적으로는 15건인데, 지난해 전체 건수(6건)의 두 배를 훌쩍 넘어섰다.

AI와 ASF는 가축전염병으로 분류돼 바이러스 발생 시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개체 출하와 도축이 금지된다는 점에서 농가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전남도는 19·20일을 '일제 소독의 날'로 지정하고 방역 취약 시설을 대상으로 집중 소독을 실시한다. 전남도는 또 심상치 않은 확산세를 대비해 예비비 10억원으로 양돈농장에 통제조소 등을 세우고 소독과 이동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문화신탁

광주문화신탁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교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교세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탁
대표번호 1644-7990

· 본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